

공감의 힘! 중소기업 3大 정책현안을 진단한다

-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

□ 개 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이나 재정지원에 환영하기보다,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새 정부가 선두로 내세운 일자리정책들 때문입니다. 이들 정책들은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달린 사안입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의 답답한 현실과 호소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문현답! 기업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여의도연구원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소기업계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주 제 : 공감의 힘!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을 진단한다

 일 시 : 2017. 6. 22(목) 10:00~12: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주 최 : 여의도연구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 제1주제 '비정규직 제로'

제2주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제3주제 '근로시간 단축'

□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비고
10:00 ~ 10: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10:03 ~ 10:05	2'	○ 주요내빈 소개	
10:05 ~ 10:10	5'	○ 개회사: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	
10:10 ~ 10:15	5'	○ 인사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0:15 ~ 10:25	10'	○ 축 사	
10:25 ~ 10:50	25'	○ 제1주제 ‘비정규직 제로’	
		<기업 현장 말씀> -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 <국회의원 말씀> <전문가 말씀> 정희선 (변호사)	
10:50 ~ 11:15	25'	○ 제2주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기업 현장 말씀> - 홍종훈 (대한제과협회 회장) -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국회의원 말씀> <전문가 말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11:15 ~ 11:45	30'	○ 제3주제 ‘근로시간 단축’	
		<기업 현장 말씀> -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 -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 - 박동희 (서울성동제화협회 회장) <국회의원 말씀> <전문가 말씀>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1:45 ~ 11:55	10'	○ 종합토론 및 폐회	

□ 참석자

시 간	성함	소속	비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국회 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정갑윤	前 국회 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김광림	前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호	前 최고위원, 안전행정위원회	
	김기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김정재	원내대변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보라	환경노동위원회	
	전희경	원내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순례	보건복지위원회	
	김종석	정무위원회	
좌장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전문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정희선	변호사	
기업인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	
	박동희	서울성동제화협회 회장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중훈	대한제과협회 회장	

□ 기업 현장 의견

■ 제1주제 '비정규직 제로'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

1. 개 요

□ 건물관리서비스산업(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은 1970년부터 시작되어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전문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고령자 및 청장년 일자리창출과 국민건강에 기여한 산업으로 105만 9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55세~70세의 고령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물위생관리(청소)업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1986년 공중위생법제정)에 의거 신고업종으로 전국에 15,817개 사업체와 82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80%이상이 중장년층의 고령 여성임.

- 경비업은 1999년 경비업법(1976년 용역경비업 제정)에 근거하여 허가업종으로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를 담당, 현재 약 4,700개 업체가 운영되고 퇴직자의 재 취업창구로 생산활동에 참여케 하는 생계형 일자리임.

* 참고자료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시설관리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건물위생관리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업)

2. 건물관리서비스산업 실태

□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비정규직 양산

- 현재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은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사용 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시행된 지 10년만에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파견직에 대한 업종은 명확하게 규정)

- 기간제법에 의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 연구직, 유치원교사, 학교 영양사, 조리사, 대학조교 등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할 것이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건물관리업종은 OECD 회원국에서도 비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나라는 없음.

□ 초고령 사회의 급속한 진입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

- 계속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8%, 2026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의 부담 및 노인의 생활기반 마련 등 정부의 재정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이 및 전망



* 생산가능 인구 : 15세~64세, 주요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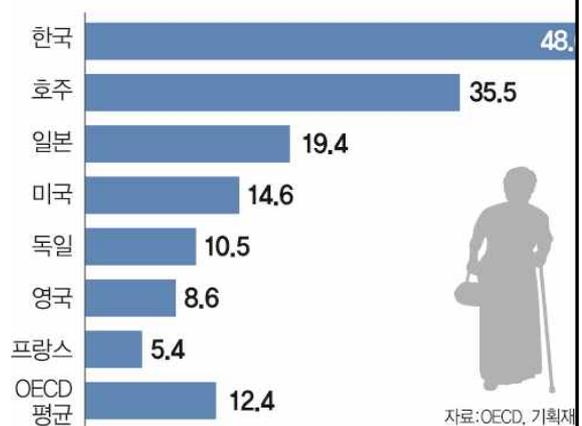
- 또한 수명연장으로 인해 현재 60세 이상 가구주 중 보유자산이 최소 생활비보다 부족한 가구가 59%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 일자리 감소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임.

〈표 3〉 60세 이상 가구주 중 보유 자산이 노후 생활비 충당에 부족한 가구(만가구, %)

	전체	적정보다 부족	최소보다 부족	
전체(60~74세)	254(100)	180(71)	151(59)	
가구주 연령별	60~64세	76(100)	58(77)	49(65)
	65~69세	88(100)	62(71)	51(58)
	70~74세	90(100)	60(66)	51(56)
1인가구	94(100)	78(83)	70(75)	
부부가구	160(100)	102(64)	81(50)	

주 : 원자료의 가중치를 이용
 자료 :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65세이상 노인빈곤율 (단위:%)



□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의 양극화 초래

-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청소와 경비업 계열사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계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이 대표적으로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며
SSM(Super Supermarket)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골목상점과 같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계열사 및 자회사 설립, 퇴직자를 통하여 청소, 경비 등 건물관리업까지 진출하여
감물아주기를 피해감으로 시장을 침해하고, 과당경쟁을 유도하여,
현재도 중소기업은 도산지경임.

3. 문제점

□ 실직사태의 대량 발생 예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체료화 정책으로 인해
60세~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들은 정년이 적용되어 실직 우려가 현실화 됨.
고령자 미채용 또는 단기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으나 2~3년 후에는 조기실직자 대량 발생예상
(민간시장은 75세 이상까지도 근무가 가능)
- 무기계약직, 자회사 설립 등으로 전환될 경우 청소, 경비직도 공개채용 해야 하는
또 다른 취업경쟁의 모순을 만들 것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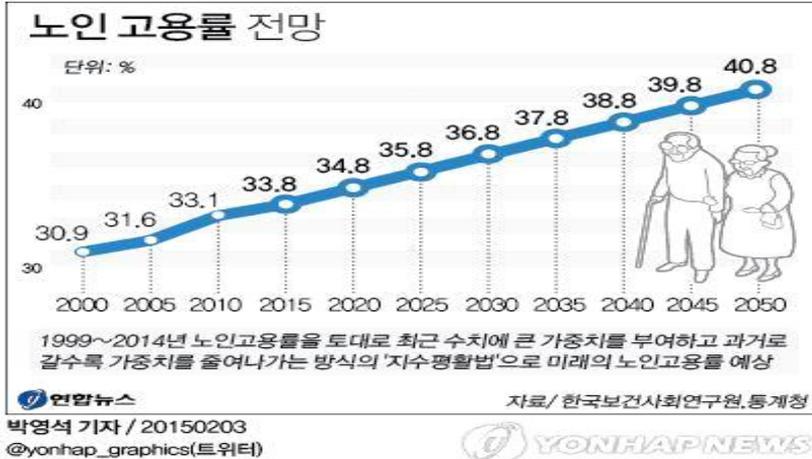
□ 민간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 대기업 또한 계열사를 통한 직접고용으로 민간의 수주물량이 급격히 감소
하여 약16,000여개의 건물청소업, 4,700여개의 경비업체 중 90%가 도산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또는 출자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매출감소로 인하여 파산 등으로 건물관리업체의 본사 근무 관리직(청, 장년)
수만 명이 실직자로 전락함.

4. 정책 제안

□ 청소, 경비업을 고령자 전문업종 지정으로 고령자 취업지원

-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65세 이상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해 기업에서도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1970년 “건축물 등의 위생적 환경 확보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건물관리 관련 8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1. 건물청소업 2. 공기환경측정업 3. 공기조화용 덕트청소업
 4. 음료수 수질검사업 5. 음료수 저수조청소업 6. 배수관청소업
 7. 쥐, 곤충방제업 8. 건축물 종합관리업
- 일본 전국 6,000개 업체 영업중

또한 “후생성 산하 건축위생관리교육센터”에서는 청소기능사 국가기능사제도를 시행하여 전문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기능검정을 통해 약 60,000명의 빌딩청소기능사를 양성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자고용법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에 고시된 청소원(직업코드:1131) 및 경비원(1120) 등을 직접 채용하는 건물관리업 (건물위생관리업, 경비업, 시설유지관리업 등)을 전문업종으로 지정 및 지원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청결 의무화 등을 위한 전문화된 건물위생관리법 제정이 필요함.

- 경비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24시간 격일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1일 3교대 근무를 의무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제4차 산업(IT)으로의 이동에 따른 고용 대체산업으로 전환

- IT발달에서 오는 고용감소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건물관리서비스 산업임.

- 오늘날 건축물은 초고층화, 대형화, 인텔리전트화 되면서 건물관리업도 선진국 처럼 중소기업 전문업종으로 육성하고 시설 및 주차관리 외 건물에서 발생하는 덕트청소 및 급배수청소 등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장년일자리” → “고령자일자리” 로 이어지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

년 도	1985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초고층건물	1	69	81	89	94	107	50층 이상

□ 입찰제도의 변경(기술력과 준법성 등) 및 장기계속계약 제도 활용

- 발주자의 입찰 시행시(1년~3년) 사업자는 변경되어도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강제하기 때문에 고용은 안정적이나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있음.
- 최초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기술력과 준법성, 재정 능력 등 관리능력을 검증하는 새로운 입찰제도 필요.
- 위탁관리업체를 재평가하여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활용, 위탁관리 전문업체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하여 삶과 노동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함.
* 미국의 “서비스마스터” 라는 청소용역회사는 매출 12조의 초우량 상장회사임.

□ 건물관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동반 성장을 촉진

- 건물관리업(청소 및 경비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여 다양한 연령층(20세~ 75세까지)의 전문직업화
- 상생협력법 제20조의 4 (적합업종 합의 신청등) 에 따라 대기업과 합의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가 시급하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시장침해를 저지하고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
- 재벌기업은 본연의 사업과 최소한의 관계된 사업만하고 이외 일감은 비계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므로써 새로운 소득생태계를 만들어 재벌기업과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수립, 홍보, 독려하여 실질소득 향상이 필요.

5. 결 언

- 건물관리서비스산업(청소, 경비업 등)의 핵심가치인 “건강·고용·자산 가치 실현” 과 건물관리업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개발, 사회적 기여 등 함께 성장 발전하는 상생시스템 구축.
- 새로운 업종 개발과 창업 지원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일자리 창출로 종사자의 전문 직업인 양성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업종 특성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한 건물관리업 시스템 재구축으로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동방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요구됨.

□ 제과점업종 피해사례 (추가 예정)

- 동네빵집의 경우 일 매출 약 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직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평균 4명임.
 - 대표자(1), 배우자(1), 종업원(2)

<최저 시급임금 : 6,470원일 경우>

- 직원의 인건비는 2017년 최저 시급임금(6,470원)을 적용하면 월 급여는 1,352,230원이며, 직원 4대보험료(133,662원)을 포함할 경우, 직원 1인당 지급 비용은 총 1,485,892원으로,
 - 직원 2명임을 감안하면 매월 2,971,784원이 지출됨.
- 월 수지분석을 하면 평균 월 매출은 약 1,500만원으로,
 - 재료비 : 약 600만원(매출의 40%)
 - 임대료 및 관리비 : 약 150만원(매출의 10%)
 - 카드수수료, 전기료 및 기타 : 86만원(매출의 6%)
 - 직원 인건비 : 약 300만원(매출의 20%)
 - 대표자 및 배우자 인건비(세전) : 약 364만원

<최저 시급임금 : 10,000원일 경우>

- 직원 1인당 인건비 인상금액은 월 급여(737,770원), 4대보험료(72,921원) 등 총 810,691원임.
 - 직원 2명일 경우, 매월 인상금액은 1,621,382원임.

☞ 즉, 상기 대표자 및 배우자 인건비(세전) 약 364만원에서 인상 금액 약 160만원을 지출하면, 남는 금액은 약 204만원이 됨.

2017년 최저임금 기준 비교

항 목	2017년 최저시급기준		시급 10,000원 인상 후		인상금액	인상율	비고
시 급	6,470		10,000		3,530	35.3%	
월 급여	1,352,230		2,090,000		737,770	35.3%	
4대보험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9% 근로자 4.5%, 사업주 4.5%	60,850	60,850	94,050	94,050	33,200	35.3%	
건강보험 보수월액*6.12% 근로자 3.06%, 사업주 3.06%	41,378	41,378	63,954	63,954	22,576	35.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55% 근로자 6.55%, 사업주 6.55%	2,710	2,710	4,189	4,189	1,479	35.3%	
고용보험 보수총액*0.65% 근로자 0.65%, 사업주 0.65%+0.25%(고용안정 150인 미만)	8,789	12,170	13,585	18,810	6,640	35.3%	
산재보험 사업주 (보수총액*산재보험료율 1.06%-음식, 숙박업)	×	16,554	×	25,580	9,026	35.3%	
4대보험 합계	113,727	133,662	175,778	206,583	72,921	35.3%	
사업주 부담 비용 직접비 + 간접비(4대보험)		1,485,892		2,296,583	810,691	35.3%	

* 간접비는 4대보험 비용만 적용함. 퇴직적립금, 구인광고비, 식대, 피복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미적용

□ 문재인 대통령 공약 관련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 시, 매년 15.6% 인상 필요. 2010년 이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6.2%(출처, 잡코리아) 감안 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인 업계 현실과 상당한 괴리(6.2% 인상률 감안 시 최저임금 1만원 수준 달성은 2025년)

□ 2019년 이후 외식경영인 수입, 직원 급여 대비 少 (외식산업연구원 자료)

- 정부 제시 최저임금 인상률 15.6%를 인건비 증감률과 연계 시, 2018년부터 매년 인건비 9.3%씩 증가
- 인건비 비중은 2017년 기준 16.1%이나, 2020년에는 20% 초과 예상. 영업이익 비중은 2017년 기준 10.5%이나, 인건비 상승 감안 시 2020년에는 1.7%까지 감소 예상 ⇨ 극단적으로, 2019년 기준 외식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연 680만원)이 종업원 1인당 총급여(연 860만원)보다 적어지는 아이러니 상황 연출 전망(통계청, 2006~2014 도소매업조사)

□ 자영업자 폐업 속출로 인한 서민일자리 상실

- 자영업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되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감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짐.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으로 이어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은커녕, 근로자의 생활터전 상실 제기 가능성 우려(2016국세통계연보, 음식점업 연간 폐업률 83.70%)
- 2011~2016년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인 16.1%와 동일하게 2018~2020년도의 인건비 비중을 제한한 결과, 2018년도 실직자 수는 10만 명, 2020년까지 누적 실직자 수는 27만 명 초과 추산. 27만 명은 2017년도 전체 종사자수의 13.0%에 해당(한국외식산업연구원)

□ 최저임금 및 직장인 평균점심값 인상률의 동일성 파괴

- 최저임금과 직장인 평균점심값의 동일가격대 유지경향 감안 시, 2020년에 직장인 평균점심값 1만원 상정은 통상적 시장물가상승률 대비 불균형(최저임금 인상 시, 동물의 소비자물가 상승 예상)

<참고> 최저임금인상률 vs 직장인 평균점심값 인상률 비교 및 인상 값 예상

연도	임금	인상%	점심값	인상%	연도	평균값임금	인상%	공약임금	인상%
2009	4000		5193		2017	6470		6470	
2010	4110	2.8	5372	3.4	2018	6880	6.2	7480	15.6
2011	4320	5.1	5551	3.3	2019	7300	6.2	8650	15.6
2012	4580	6.0	6007	8.2	2020	7750	6.2	10000	15.6
2013	4860	8.1	6219	3.5	2021	8230	6.2		
2014	5210	7.2	6488	4.3	2022	8740	6.2		
2015	5580	7.1	6566	1.2	2023	9290	6.2		
2016	6030	6.1	6370	-3.0	2024	9860	6.2		
2017	6470	7.3	6100	-4.2	2025	10470	6.2		
평균		6.2		2.1	6.2% vs 15.6% 5년 격차 존재				

□ 자영업계 건의사항

1 순차적 최저임금 인상 절실

-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경영자 부담으로 사업체 경영위기 및 직업안정성 하락 명약관화
- ⇒ **[건의]** 최소 6년~8년 경과 후 1만원으로 인상 필요

2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 제도정비 선행 필요

- △국가별 최저임금산정 기준, △국가별 GDP 규모 및 통화가치, △최저임금 의사결정구조(독일의 경우 국회에서 결정,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국 제도 분석 선행 후,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정립 시급
- ⇒ **[건의]** 최저임금결정제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보편성 및 타당성 획득 후, 인상 논의 필요

3 거시 차원의 종합 대책 제안

-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과도한 세금부담 등 서민자영업 문제에 관한 종합대책 청사진 마련 시급
- ⇒ **[건의 1]** 사회·경제 이슈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방지 및 경기종합부양책 실행 이후, 최저임금 인상논의 필요

[건의 2] 사회적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분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필요. 이 경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정부지원금 수령 시, 절차 등 간소화 조치 필요

[건의 3]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특례업종 제외 근로기준법안도 국회논의 중인 가운데, 설상가상 최저임금 인상까지 실행될 경우 총체적 위기 봉착(음식점업은 심각한 구인난 상황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 1일 2교대 근무 인적 자원 절대량 부족)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유예 필요

제3주제 '근로시간 단축'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24시간 주야를 풀가동해야 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 치명타이다.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대가 끊어져 탄식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주물·용접·금형 등은 대체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불가피한데, 과연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임금은 조정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흔히 3D업종으로 불리는 기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데,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쉬운 환경도 아니고, 가능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지 새 정부가 구상했던 일자리 창출과도 괴리가 있다.

오병균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

(1)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목표 및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

- 현 정부 공약사항인 131만개 일자리 중 81만개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나머지 50만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주 68시간인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길다는 점에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시 주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한 번에 단축되어야 하므로, 기업들은 인력난 심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유소업계 예상 문제점

-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업소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함
 - 현재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 근무가능한 동 자격 소지자 채용은 거의 불가능하여 사업주가 자격을 소지하고 거의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채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동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